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북도 등과 10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특례조항 반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자도법 농림 분야 제도개선 방안 논의

도-도내 정치권, 전북농업 청사진 완성 실질 이행 대안 마련 위해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전북도 등과 10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특례조항 반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상 농림 분야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일 산업·환경 분야에 이어 2번째 간담회다.

1차 산업·환경분야 간담회가 미래 전북의 산업 유치와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조화롭게 이끌 것인 가 고민한 자리였다면, 이번 2차 간담회는 미래의 전북농업에 청사진을 완성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안 실행에 근간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서 농림 분야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전에 국회-전북도-정부부처가 모여 제도개선에 불필요한 칸막이 제거와 소통을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먼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대한 절차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본계획과 지구 지정 및 변경·해제와 관련해 특례조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농생명지구내 적용에 필요한 현행법 상의 제도 정비와 현재 추진 중이거나 도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청년농업인 양성 등 전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농생명용지의 산업적 이용 특성을 고려한 이용계획과 효율적 개발에 대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전북의 동부 산악권을 친환경 글로브 관광지로 마련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협력적 이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3개 부처(산림청, 환경부, 국토부)가 관련 있고 협의와 제도 개선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특례 조항이 반영되면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해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호영 의원은 "2차 간담회(농림)를 통해 전북의 미래 먹거리와 농업산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제도 개선에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라며 "딜레이 간담회를 통해 전부개정안에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는 최종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부처 수용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표방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 농생명산업 육성 분야는 큰 축을 담당한다. 새만금 지역 내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항만 개정안에 담았으니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부처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의 릴레이 간담회는 12일 복지 분야 특례조항에 대한 3차 논의를 끝으로 종료한다.

/김재훈기자·무주=전문선기자

이낙연 전 총리, 주한 프랑스대사와 차담

대사관 측 요청으로 추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10일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와 차담회를 가졌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필립 르포르 대사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번 만남은 주한프랑스대사관 측 요청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귀국 전인 지난 4월 28일, 지난 1년 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유학한 내용을 담아 '대한민국 생존전략 - 이낙연의 구상'이란 대외 전략 관련 도서를 발간했다.

당시 이 전 총리는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이 단독 주도한 탈냉전 시대는 대한민국에 선물 같은 기간이었다. 대한민국은 냉전의 굴레를 벗고 불안정한 평화라도 누리며 외교지평의 확대와 경제적 번영을 향해 질주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냉전전략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지만 이제는 외교도 학자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사진 오른쪽)가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와 차담회를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외교관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됐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출간 이후 미국 내는 물론 독일 등 유럽에서도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귀국 당일 공항에서 "강연으로 인해 저의 공부는 더 두터워졌다"고도 했다.

/뉴시스

'전주시민 누구든 위기가구 의심 사례 신고 가능해져'

채영병 전주시의원 발의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사례 신고할 경우 해당 시민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채영병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제4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영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실패에 따른 비극을 막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전달이 원활치 않거나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통과로 단체·시설은 물론 전주시민 개인이 주변의 위기가구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해당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14년 '송과 세 모녀 사건' 이후 각종 공과금 관련 자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등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전산 정보가 빠져 일어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 발굴 실패에 따른 비극이 계속된 바 있다.

채영병 의원은 "이번 조례의 통과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 발굴 실패로 인한 가슴 아픈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10일 김선하·이영주 변호사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날 열린 위촉식에서 최종오 의장은 김선하, 이영주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위촉된 두 변호사는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각종 입법업무와 법률적 사안에 관해 자문하게 된다.

최종오 의장은 "제외 의회 개원 이후 의원들의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어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입법·법률 고문의 탁월한 역할을 통해 익산시의회에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